

조선시대 책은 어떻게 유통됐나(1)

독서의 풍속사 — 11

강명관 |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조선시대에 국가기관에서 발간한 책들은 상업적으로 유통되지 않았다. 왕이 책을 각품의 관리들에게 하사하는 방식으로 책이 유통됐다. 이것이 반사다. 관리라 해도 반사의 대상에 들지 못하면 새 책을 보기 어려웠다. 관료조직 속에 속하지 않은 양반, 지방 양반들은 반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일반 민중들은 아예 책을 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처럼 조선시대 책의 유통은 왕과 고금관리들에게만 한정돼 있었다.

책의 생명은 유통이다. 유통되지 않은 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책의 유통은 책의 존재만큼이나, 아니 책의 존재보다 더 중요하다. 책을 저주했던 독재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책의 존재가 아니라 책의 유통이었다. 지은이를 잡아다 죽임으로써 위험한 사상의 싹을 잘라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단 한권이라도 불온한 책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언제라도 복제돼 유통될 수 있다. 책의 유통이야말로 책이란 물질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다.

책의 유통방식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책을 구입하기 위해 책을 진열한 특정공간인 서점으로 가야 했지만, 이제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서점에 주문한다. ‘출판사-서점-독자’란 구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책의 유통 방식의 역사적 변화는 지식 유통의 역사 변화와 다르지 않다. 책의 유통 방식의 변화를 탐구하는 것은 실로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조선시대에 책은 어떻게 유통됐을까? 서울 시정에 서점이 출현한 것은 빨라도 19세기 이후의 일이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책이 어떤 방식으로 독자의 손에 전달됐을까? 이제 몇 회에 걸쳐 조선시대 책의 유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주자소에서 책을 팔았다는 기록은 없어

조선전기 책의 인쇄와 출판은 국가와 관청이 주도하고 있었다. 앞에서 말한 주자소와 교서관이 바로 그곳이다. 이곳에서 인쇄된 책은 어떻게 독자의 손에 들어갔던가? 주자소의 설립 목적은 분명히 책을 판매하는 데 있었다. 《태종실록》 10년 2월 7일에 “비로소 주자소에 명하여 서적을 인쇄해 팔게 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그러나 주자소에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책을 판매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나는 《실록》에서 주자소에서 책을 상업적으로 팔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자소와 교서관의 책은 어떻게 보급되고 유통됐던 것인가?

주자소와 교서관에서 인쇄된 책은 ‘반사’ (頒賜)의 형태로 보급됐다. 《세종실록》 22년 8월 10일 기록에 “주자소에서 서적을 인쇄하여 각품(各品)에 나누어주는데, 그 받은 자가 마음을 써서 장항(粧潢, 제본)하지 아니하여 책이 헐게 된다”고 하면서 3개월 이내 제본해 선사기(宣賜記)를 받도록 하라는 기사가 있다. 이 기사를 통해 주자소의 책이 각품의 관리들에게 하사됐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자소에서 인쇄한 책은 대부분 중앙의 관료들에게 하사된 것이다. 이런 반사 기록은 《실록》에 자주 나타난다. 세종 때의 경우를 몇 들어보겠다. 책의 하사 기록은 많으나, “주자소에서 인쇄한”이란 말이 붙은 것 몇가지 경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주자소에서 인쇄한 《통감속편(通鑑續編)》을 바치므로, 문신(文臣)에게 나누어주었다” (《세종실록》 5년 8월 2일).

“대소 문신에게 주자소에서 인쇄된 《송파방(宋播芳)》을 한 부씩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6년 1월 11일).

“주자소에서 인출된 《대학대전(大學大全)》 50여 벌을 문신에게 나누어주었다” (《세종실록》 6년 2월 14일).

“주자소에서 인쇄한 《장자(莊子)》를 문신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세종실록》 7년 1월 17일).

“주자(鑄字)로 인쇄한 사마천의 《사기(史記)》를 문신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세종실록》 7년 11월 8일).

《세종실록》을 살펴보면 이런 방식으로 관료들에게 책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허다하게 나온다.

국가가 발간한 책은 반사의 형식으로 보급돼

반사를 담당하는 관서는 교서관이었다. 교서관의 기본 임무는 책의 ‘인쇄와 반포’였다. 주자소나 교서관에서 어떤 책이 인쇄되면, 교서관에서는 반드시 반사의 대상자 명단인 반사기(頒賜記)를 작성해 임금에게 올린다. 왕이 이 명단을 보고 해당자에게 낙점을 하면 그 사람은 책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유희춘(柳希春)의 《미암일기초》에는 자신이 책을 반사받은 기록을 상당히 남기고 있는데, 그 중 참고가 될 만한 것을 인용해보자.

“교서관에서 《백가시(百家詩)》를 다 인쇄했다고 하여 먼저 15권을 진상하고, 나머지 국용(國用) 1백 50권 내에서 10권은 융문루(隆文樓)와 융무루(隆武樓), 그리고 여러 관(館)·부(府)·조(曹)에 나누어 간직하게 하였다. 그 나머지 1백 38권은 낙점(落點)하여 종친(宗親), 부마(駙馬)로서 2품 이상, 삼공(三公), 1품에서 2품, 여섯 승지,

홍문관 주서(注書), 한림(翰林), 대간(臺諫) 및 참의(參議), 감사(監司) 등 통정(通政) 중에서 빼어난 사람에게 하사하였다”(《미암일기초》, 경오 9월 26일).

이것이 중앙에서 찍은 책의 기본적인 보급 방식이다. 먼저 진상, 곧 임금의 개인적인 용도로 일정한 양을 바치고, 그 다음 국가 발행의 도서를 납본받아 저장하는 궁중의 도서관인 용문루와 용무루에 일정량을 할당한다. 그 다음이 관(館)·부(府)·조(曹) 등의 명칭을 단 중앙 관청에 하사된다. 이 뒤에 개인에게 반사가 이뤄지는 것인데, 종친이나 부마 등 왕실의 친척 그리고 관료조직의 상층부를 이루는 영의정·좌의정·우의정과 승정원의 승지, 홍문관·사헌부·사간원·관찰사 등 권력기관에 책이 배포되는 것이다. 예컨대 《미암일기초》의 경오년 8월 12일조는 《근사록》의 반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해안군(海安君) 등 종친 25명과 영의정·좌의정·우의정, 육조의 참판,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승지, 주서, 사관 등 고급관료다.

조선전기의 활자본이든 목판본이든 1차의 발행량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 2~3백부를 넘어서는 경우가 드문데, 이것은 대부분 중앙



조선시대 책은 반사라는 형식으로 유통됐다. 그러나 반사의 대상은 고급관료에 한정돼 있었다. 사진은 조선시대 책거리 그림(민화).

의 고급관료에게 하사됐다. 관료조직 속에 소속되지 않은 양반 그리고 지방의 양반들은 반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일반 민중들이라면 애초 문맹이니 아예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고급관료로 오래 재직하면, 반사의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책을 제법 모을 수가 있었다. 홍귀달(洪貴達, 1438~1504)은 <사인여강

“국가의 인쇄, 출판기관에서 발간한 책은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로지 왕의 주위에 있는 소수의 고급관료만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이었다. 설령 책을 구입할 의사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다 하더라도 반사의 대상이 들지 못하면, 떡 냄새를 풍기는 새책의 책장을 넘기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목서(謝人與綱目書)란 글에서 자신이 반사를 받은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고할 가치가 있다. 그는 원래 책이 없어 남에게 궁색하게 빌어보는 처지였으나, 관로(官路)에 들어선 후 청현직(淸顯職)을 거치면서 임금의 은혜를 무한히 입고, 또 반사 서적의 명단에서도 그의 이름이 항상 남보다 앞서 있었다고 회고한다. 그래서 집안은 가난했으나, 책만은 남보다 부유하다고 자부할 정도였다. 그가 상을 당해 5~6년 동안 서울을 떠나 있다가 돌아오자 벽에 전에 보지 못했던 책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물어보자 집안 사람들은 그가 없을 때 임금이 하사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홍귀달은 1460년(세조 6년)에 과거에 합격해 예문관 봉교, 세자시강원 설서, 장령, 직제학, 승지, 형조·이조의 참판, 대사성, 대제학, 호조 판서, 좌참찬 등 청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그의 관력은 세조로부터 성종대에 걸치는데 이 시기는 출판 인쇄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다. 그는 언제나 서적 반사의 대상권에 들어 있었으며, 그래서 반사된 서적만으로도 제법 풍부한 장서를 꾸밀 수 있었던 것이다.

국가 발간 책은 소수 고급관료에게만 보급돼

국가 기관이 발간한 책이 반사의 형태로 독자의 손에 전달되는 방식은 조선조가 종언을 고할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따라서 국가의 인쇄, 출판기관에서 발간한 책은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로지 왕의 주위에 있는 소수의 고급관료만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이었다. 설령 내가 책을 구입할 의사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반사의 대상에 들지 못하면, 떡 냄새를 풍기는 새책의 책장을 넘기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인쇄란 무엇인가? 지식의 독점을 해체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인쇄의 결과물인 책이 소수 관료의 독점물이라면, 인쇄의 의의는 어디 있던 말인가? 조선시대 활자 인쇄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